



배포 일시	2022. 12. 16.(금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조상원 (044-201-460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“철도안전 쇄신에 민간 안전전문가의 힘 보탠다”

- 민간 안전 전문가 100명 위촉 ... 한강철교 차량고장부터 긴급 점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일선 철도현장에서 시설유지보수, 차량정비, 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·관리하기 위하여 12월 16일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영등포역 퀘도이탈, 오봉역 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.
 - 특히, 어제(12.15) 저녁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동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며, 이로 인해 탑승객은 견인이 될 때까지 2시간 이상을 강추위에 견디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생한 한강철교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차량유지 관리 실태와 차량고장에 따른 비상대응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시작으로,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을 오늘(16일)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 - 오늘부터 실시하는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 20명과 철도 차량·철도교통 관제·철도시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이 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지게 되며, 철도현장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- 민간전문가가 철도안전 점검에 참여함에 따라 종전 철도안전감독관들로만 이루어진 점검팀이 6개 팀에서 18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어, 더 많은 철도현장을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한편, 개선이 필요한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,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투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“철도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” 이라면서,
 - “안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, 철도조직이 안전을 튼튼하게 다지고 지키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 라고 말했다.